

소 외 계 층

김 경 동
(서울대 사회대 교수)

세상의 어떤 일(職業)은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며, 그 일을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 마땅한가? 이 문제는 계층이론에서 논쟁의 쟁점으로 삼아 온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사장과 관리적 종사자와 현장 근로자 중 누가 더 중요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전 본부에서 지휘하는 장군과 최전선에서 적과 죽음으로 맞서는 소총수 중 누가 더 중요한가? 아마도 올바른 대답은 그들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직종,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중시하고, 그들은 더 유리한 보상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게 실정이다. 그러면,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대개, 차별적 보상의 정당화 논리는 이러하다.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일은 그만큼 수행하기 힘들고, 뛰어난 능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일에 걸맞는 인재는 희소하므로 이들에게 특별한 유인(誘因)을 제공해서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논지에 대한 반론은, 일이란 모두가 중요한데 그 중 좀 힘든 일이라도 웬만한 사람이면 해낼 수 있지, 인재가 특별히 희소한 건 아니다. 희소하게 된 까닭은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켜서 이득을 볼 기득권자들이 기회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회만 개방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차별적 보상이 필요할 까닭은 없다.

우리가 소외계층이라 일컫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이론적 쟁점이 도사리고 있다. 앞에서 관료, 군부, 재벌, 유학생 등을 변화, 특히 공업화의 동력으로 내세웠을 때는 이들을 엘리트층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엘리트로서 이 사회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또한 받아 들인 셈이다. 한데, 솔직히 우리가 근로자 계층, 도시 비공식부문의 하류계층, 농촌의 하층민, 여성, 고령자와 청소년층들을 놓고도 꼭 같은 평가를 서슴없이 하는가 성찰해 보면, 대답은 부정적인 방향

으로 흐른다. 이들에게 엘리트의 칭호를 부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기능과 구실도 상대적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경제적 보상이 보잘 것 없어도 이를 탓하거나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이들의 하는 일은 누구나 대신할 수 있고 특별한 기량이나 훈련, 지식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엘리트는 응당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엘리트는 그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체계와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지하려는 세력임을 주지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어떤 일이든 사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 들인다면, 차별적 보상은 사회적 배분정의에 일단 어긋나게 된다.

사실, 공업화의 진전 과정에서 많은 후진지역의 엘리트들은 권위주의적인 기술관료가 핵심이 되어,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근로자 등 이론바 소외계층을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배분과 사회문화적 삶의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정책을 의식·무의식 간에 수립, 집행하기 쉽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서양중심적 일반이론에서는 공업화가 중산층 비대화의 효과를 자아낸다는 결론으로 만족함으로써, 이들 소외계층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이들의 상대적 위치와 구실 및 고정(苦情)을 따로 부각시키기로 하였다. 여기에 포함시킨 집단, 범주들은 서로 이질적인 다양한 무리들이면서도 배제와 소외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함께 다루게 된 것이다.

〈근로자 계층〉

여기서 근로자 계층이란 주로 근대적인 조직부문에서 피고용인으로 종사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시작할 무렵, 1960년 현재의 총취업자는 7백만여 명에 불과했다. 당시의 근대조직부문 취업자는 전체의 7.1%에 머물렀고, 전통부문 중 농림어업 종사자가 66%에 이르렀다. 1981년에 오면, 취업자 총수가 그 때의 배인 1,400만을 넘었고 근대부문에 24.7%, 도시비공식부문에 32.1%의 취업자가 종사하게 되었으며, 전통적 농림어업은 34.2%로 60년의 절반의 비중으로 떨어졌다(표 1).

이처럼 근대부문의 근로자가 절대수에서나 상대적 비율에서 가장 급격히

〈표 1〉 근대, 농촌 및 도시비공식부문의 취업자 추세

(단위 : 천명, 광호안 %)

연도	총 취업자	근대부문	농림어업	전통부문	
				농촌비농림어업	도시비공식부문
1960	7,028 (100.0)	496 (7.1)	4,632 (65.9)	811 (11.5)	1,089 (15.5)
1965	8,206 (100.0)	832 (10.1)	4,810 (58.6)	935 (11.4)	1,629 (19.9)
1970	9,745 (100.0)	1,494 (15.3)	4,916 (50.4)	1,068 (11.0)	2,267 (23.3)
1975	11,830 (100.0)	1,970 (16.7)	5,425 (45.9)	1,154 (9.8)	3,281 (27.7)
1981	14,048 (100.0)	3,472 (24.7)	4,806 (34.2)	1,266 (9.0)	4,504 (32.1)

(자료) 배무기『노동경제학』1984.

게 늘어나면서 공업화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한 뜻을 하였음이 드러난다. 이 점은 사람들의 의식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1967년과 1978년의 두 차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와 관리자들은 기사, 광부, 숙련공, 농어부, 직공과 같은 직업이 경제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직업들은 사회적 위광(威光)의 평가나 수입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임이 또한 밝혀졌다.

간단한 표본조사의 보기에도 지나지 않는 이러한 결과는 기실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뜻을 담는 것일 수가 있다. 역시 같은 조사연구에서 우리는 한국의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일에 대한 헌신몰입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역시 60년대 중반에 실시한 국제 비교연구에서도 한국의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일본이나 미국의 응답자들에 비해 성취지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누가 한국의 공업화를 이끌고 나갔느냐 할 때는 관료, 기업가, 기타 엘리트를 뽑겠지만, 누가 실직으로 이를 떠밀고 나왔느냐 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성취지향이 강하고 일에 대한 헌신몰입도가 높은 우리의 근로자와 관리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 중 근로자들은 사회적 존경이나 경제적 보상 면에서 계속 가장 불리한 위치에 머물지 않으면 아니 되는 쓰라림을 겪어 왔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거의 없고 자본도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시작한 경우 가장 큰 공헌을 한 요소는 바로 인간요소이다. 그런데,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해도 대체로 그것은 정치적 결탁으로 퇴

색하였고, 관리기술이나 기술혁신은 자생적이기 보다는 외국에서 도입한 것에 힘입었으므로, 결국 골수로 남는 것은 근로자들의 훌륭한 자질, 즉 높은 교육수준, 성취지향이며 혁신몰입이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그런 근로층에게 사회는 과연 무엇으로 보답해 왔는가 말이다. 1977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지만, 근로자 월소득액이 과세미달인 4만 5천원 미만인 범주가 무려 78.8%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무엇의 입증인가? 그런데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또는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둑어 놓고, 노사협의제니 공장새마을운동이니 하는 식의 온정주의적 사탕발림으로 잠재적 노사갈등을 막아 보려는 정책만 고수해 왔다.

그런데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운동은 이빨 빠진 맹수로 전락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엘리트 혹은 노조귀족이 형성되어 경경연합세력의 하수인으로 변신하는 양상마저 떠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니 만큼, 근로자들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공정하게 배당하는 배분정의와, 그들의 삶 전체와 일하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행사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민주주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바로 이처럼 양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공업화의 경제성장에 적극 협조해 온 근로자들이 계속 국가발전에 혁신몰입하도록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면, 배분정의와 산업민주주의의 확대에 있지 않을까 한다.

〈비공식부문의 하류계급〉

위의 〈표 1〉에서 근대적 조직부문 다음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부문이 도시비공식부문으로 되어 있다. 이 부류는 사실 자영 중산층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소외계층으로 관심을 갖는 이들은 주로 도시의 비공식부문에서 주변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빈곤 속에 살아가는 하류층이다. 이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입한 인구가 대부분이며, 토목건축업, 각종 씨비스업, 하청생산업 등의 잡역과 떠돌이상인, 일금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도시 주변 고지대의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한다.

열핏 보아 이들은 공업화의 희생물들이지만, 또 달리 보면, 어차피 이중적인 구조를 띤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와중에 그나마 불리한 전통부문에서 불안정한 고용관계의 고리에 매달려 생존하면서 앞서 나아가는 교두보인 근대적 조직부문에서 수시로 필요로 하는 찐 노동력을 부정기적으로 무한정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공업화에 기여해 온 층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근대적 도시부문에서 실패하고, 낙후된 사람들이 흘러들어 임시로 정착하는 일종의 하강이동자의 임시 수용소 구실을 하기도 한다.

다만, 한 가지 우리사회에 특이한 점은 비록 이들이 빈곤 속에 불안정한 삶을 누리기는 하지만, 결코 거기에 안주하여 퇴락해 버리는 「빈곤문화」의 희생물로 전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고 다시 상승이동이 가능하다는 소망을 안고 와신상담 재기를 노리다가 기회만 오면 그곳을 빠져 나가는 상향성 하류계층이다. 이 점은 농촌의 하류계급인 소작농과 농업노동자층에게도 공통점이다. 물론 이들의 상황이 거의 절망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상승이동에의 열망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사회 전체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공식부문으로 병합될 기회가 얼마나 빨리 주어질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노동집약적 산업의 여지가 있었고 비공식부문의 적극적 기능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기술집약, 자본집약적 산업고도화가 이들 비공식부문의 하류계층을 끝까지 하류계급으로 고착시켜 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구실과 좌절의 憎〉

「여자의 원한은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는 옛말이 있거니와, 우리문화의 얼기설기 얹힌 그물 속에는 憎의 요소가 상당히 깊이 그리고 폭넓게 자리하고 작용하는 것 같다. 그 한의 주체는 대개 여성이고 여성의 그 뼈저린 한은 또 주로 남성중심 사회문화에 원천을 두고 있다. 근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조선사회에서는 더욱 더 여성을 통제, 차별하는 가치규범으로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교적 통제규범은 철저하게 남성위주였다.

해방과 더불어 도입된 서양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은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적어도 이념상으로나마 인정하게 하는 변화를 일게했다. 그런데다, 교육의 보편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평균 학력이 1966년에 3.97년(남자 6.19년), 70년에 4.72년(남자 6.86년), 75년에 5.70년(남자 7.61년), 그리고 80년에는 6.63년(남자 8.67년)으로 꾸준히 올랐고, 4년제 여자대학생 수도 65년에 3천 8백여 명이던 것이 80년에는 9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여성도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공업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표 2>에

〈표 2〉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세 (단위 : 천명)

	경제 활동 인구총수	경제 활동참가율(%)			성별 대비 (B/A)
		합 계	남(A)	여(B)	
1960	7,543	49.0	74.4	26.8	36.0
1966	9,071	55.4	76.5	36.2	47.3
1970	10,199	55.9	75.1	38.5	51.3
1975	12,340	56.5	74.5	39.6	53.2
1980	14,454	57.1	73.6	41.6	56.5
1982	15,080	56.8	72.5	42.2	58.2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3.

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노동력은 대개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등에 집중된 테다, 그 고용지위는 자영이나 가사노동이든가 아니면 제조업의 경우라도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숙련노동에 종사하는 게 보통이었다. 게다가 고급여성인력은 극히 소수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취업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직장내의 지위나 승진기회 및 보수 등에서 남자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여성의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더 많은 반면에 임금수준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표 3).

성에 의한 차별이나 기회의 불균형은 경제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정치적인 결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여성의 진출이 거의 막혀 있다. 실상,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는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테서 시작하여 비인간화의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출생시부터 남아선호 가치가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 천시되기 시작하여, 차별적 사회화를 철저히 받음은 물론이려니와, 교육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차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표 3〉 성별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대비

	월 근로 시간		B/A %	임 금 (원)		D/C %
	남 (A)	여 (B)		남 (C)	여 (D)	
1972	—	—	—	29,319	13,225	45.1
1975	218	224	102.8	60,319	25,465	42.2
1980	228	236	103.5	222,956	95,692	42.9
1982	229	238	103.9	309,247	135,979	44.0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3.

남성중심의 비인간화 현상은 갖가지 여성의 착취와 도구화로도 나타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잠재력은 다 같은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차별과 속박의 대상으로서 오래 존속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보여 주는 반응의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충격인 것이다. 이 시대는 가족구조의 변화, 주거양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습관의 변화, 경제성장의 결과로 늘어나는 여가와 오락의 기회 등을 통하여 여성의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증대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적, 인간적 해방을 소리 높여 부르짖건만, 제도나 가치의식이나 행위유형에서 남성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 협력하고 길을 터주지 않는다면, 그 결과란 여성에 의한 왜곡된 일탈적 반응이기가 쉽다. 그 동안 우리사회를 들끓게 한 숱한 사건들의 이면에는 여성의 빗나간 속질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춤바람, 도박바람, 치맛바람, 투깃바람, 복부인, 큰손 등 많은 별명들을 가진 충격적 세력들이 모두 여성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어머니로서 장차 이나라의 주인들을 길러내는 일차적인 사회화의 담당자들이다. 그들이 좌절과 불만, 또는 허욕과 야망으로 비뚤어질 때 새 세대는 어떤 인간들로 자랄지를 진지하게 성찰한다면, 우리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치와 제도와 구조를 하루속히 바꿀 태세를 갖추어 마땅할 것이다. 여성은 비단 공업화에 기여하는 인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모성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남성의 동반적인 인구의 절반되는 범주로서 이 사회의 변동에 음으로 양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임을 인정할 필요가 절실히다. 그 힘이 부정적으로 새나감으로써 원한에 사무친 반사회적 결과를 가져 오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껏 뻗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모두 찾을 일이다.

〈고령자와 청소년〉

「내가 이젠 사람 구실을 못 하는구나！」하는 한숨어린 푸념과 함께 아파트 13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결코 우리사회와는 동떨어진 물건너 불이 아닌 세상이 되고 있다. 대체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1960년대 중엽부터 시작된 인구전환과정에서 수명이 길어지게 된 결과 고령인구 또는 노년인구가 절대수, 증가율, 구성비, 노년인구지수, 노년화지수 등 일련의 인구통계적 지표 상으로 급성장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인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955년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전체인구의 3.3%였다가 1980년 현재 3.9%로 늘어났지만, 이 수준은 아직 선진국의 10% 이상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실수로 보면 55년에 713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가 80년에는 1 백 45만에 육박하여 4반세기에 꼭 두 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의 총 인구는 1.7배 정도 증가한 데 비해 확실히 빠른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한편, 14세 이하의 연소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比)인 노년화지수는 55년의 8%에서 80년에는 11.4%로 늘었다. 다만, 연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아 부양 책임을 맡은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사실이나, 고령자층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쟁점들을 던져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져 보면, 고령자들이란 누구인가? 이들이 20~30년 전에는 사회의 중추 인구로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쓴 장본인들이며, 그 와중에서 지금의 중추인구를 잘 키워 준 세대인 것이다. 물론, 이들의 노력의 결과가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금물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세대는 또 한편에서 보면, 격변의 파도가 일 적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대교체의 물결에 휩쓸려 밀려나기 일쑤인 경험을 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나마 농촌에서는 젊은 세대의 이농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노후까지도 농사일에 종사해야 하는 필요 때문이라도 소일거리가 있다. 그러나 도시의 웬만한 조직체에서는 공식적으로 55세 정년을 고수 할 뿐더러, 중소기업체들에서는 40대에 은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조기 정년은 유용한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커다란 사

〈표 4〉 인구의 연령구성과 관련된 주요 지표

	총 인 구 (천명)	연령 3대구분 구성비(%)			노년화지수
		0~14	15~64	65+	
1955	21,502	41.2	55.5	3.3 (713천)	8.0
1960	24,989	43.0	53.7	3.3 (825천)	7.7
1966	29,160	43.5	53.2	3.3 (961천)	7.6
1970	31,435	42.1	54.6	3.3(1,039천)	7.8
1975	34,679	38.1	58.4	3.5(1,207천)	9.1
1980	37,407	33.8	62.3	3.9(1,446천)	11.4

(자료) 윤종주 「우리나라 노인문제에 대한 인구학적 고찰」 1983,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3.

회문제로 대두한다. 결국 노후보장을 가족에다 기댈 수밖에 없는데, 가족제도 자체는 공업화,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부부중심가족으로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전락하고 만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노인들은 좀체 사라지지도 않은 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필요하거나와 정년제도를 재조정하여 젊고 건강한 고령자들의 경험과 경륜을 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밖에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자발적 봉사제도를 확충하여 노년의 삶을 보람있게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마땅하다.

가족구조의 변질과 사회적 관계 및 가치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소외의 아픔을 맛보면서 자칫하면 사회적 일탈의 유혹으로 빠져 들기 쉬운 세대는 청소년층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14세 이하, 이른바 피부양 연소자 인구는 지난 30년 사이에 꾸준히 줄어 들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추진과 관련 조출생률이 60년대초의 천명당 32명 선에서 82년 현재 23명 정도로 떨어진 데 힘입은 변천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반드시 이들이 과거 한 세대의 사회변동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청소년층에서 연소자를 제외한 10대와 20대는 상당수가 산업일선에서 공업화에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 인력의 진출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평균 임금수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는 조건 아래 노동력을 제공해 왔다.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밟으며 삶을 즐기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진학자들과 경쟁에서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한데도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청소년층의 고충과 좌절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이 우리의 주목을 끌어 마땅한 까닭은, 이들이 장래의 역사를 짊어질 주인공들이라는 점 말고도,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사회변동에 의하여 심각한 충격을 경험하는 세대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당한 직장 청소년과 부랑청소년들을 우리는 다독거려 줄 책임이 있다. 이들은 쉽사리 범죄와 비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한 원천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이 계속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그 종류와 질이 조악하고 폭력화해 가는 추세를 대할 적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범행의 동기가 유홍비 마련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테 있음을 서슴지 않고 토로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성세대가 이들을 얼마나 잘못 인도하고 있는가를 새삼 뼈아프게 성찰하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의 어린이 젊은이들은 욕구를 발산할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을 갖지 못했다. 건전한 경서함양에 필요한 놀이터, 운동장, 공원,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어른들은 갖추어 주지 못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심어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끝으로 소외계층이라고까지 하기 어려우나 사회로부터 외면당해 그늘진 구석에서 어두운 삶을 누려야만 하는 고아, 지체부자유자, 버려진 아기, 무의탁자들 같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풍요를 구가하는 일부 소수계층이 과시소비에 굽굽한 상황에서,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가 회피할 수만은 없는 계층인 것이다.